

이들간 끌고다니며 각목으로 때리고 성추행 범죄에도...

“아직 어리다”... ‘예방이 우선’ 답변만?

청소년 범죄, 막을 길 없다

靑 게시판에 법 개정 청원 잇따라
법조계 “잔혹범죄 실행강화” 목소리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법에 형량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할 지 주목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루는 32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 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불안정한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일어나므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해자는 ‘잔인’, 피해 가족은 ‘울분’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교활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학생 B양 등 10명으로부터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모집한 B양 등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A양이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끼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양 가족은 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가해자 4명을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 가족의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9월 1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달 이내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원 인원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가정에서 안 하는 ‘예방’... 실행 강화가 답

앞서 청와대가 형량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 폭력 예방을 밖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 소재 학원 강사 신모(30)씨

는 “형량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상당수가 자식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려 든다”며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역시 ‘사회적 최소 단위에서 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를 만 10세~12세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현재 만 14세~19세 소년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도 사안에 따른 특별법을 양산하지 말고, 형법 등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법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9일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헌법재판소가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신청 인신청원을 비롯한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음성안내와 점자키패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기기 조작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발급기는 재판소를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와 국세증명, 토지·건축·차량관련 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를 일반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법종 기자

백운규 “올 여름, 하계수급이래 최대 공급여력 확보”

(산업부장관)

산업부, 전력설비 현장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9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일을 맞아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올 여름은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근의 이상기온,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예보 등에 따라 전력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 장관은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각 전력유관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9일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종시 세종발전본부를 방문,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전력거래소에는 하계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비상자원에 대한 불시

점검과 정전, 고장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을 7월 중 완료해 비상상황 발생시 철저히 대비토록 강조했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는 하계 피크전에

준비를 마쳐 발전설비를 적기 가동해 피크시 전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소는 여름철 고온에 따라 석탄 자연발화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화재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송전선 및 배전설비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 점검과 긴급 복구태세를 강조했다.

예비력이나 안정적이라든가 송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국지적인 정전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전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력그룹사 모두 하계 수급대책기간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수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최신웅기자 grandtrust@

문체부

월미도 놀이기구 전수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월미도 유원시설 안전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월미도 유기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월미비치랜드’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썬드롭’의 추락사고 이후 문체부와 인천중구청이 지난 3일 실시한 현장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구 85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서울랜드, 아월드),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오진희 기자

전북일대 ‘제4호 말 산업특구’ 지정

농식품부, 승마 등 육성사업 추진

전라북도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 지역이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제4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전북은 2017년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km²)으로 구성돼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75개소에서 448두(지정기준의 3.2배)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통해 한해 3만2000여 명이 승마체험을 즐기고 있는 등 말산업 육성에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김동연, 러시아 기술박람회 ‘이노프롬’ 참가

95개국 기업인 5만여명 모여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최대의 국제산업 기술박람회 ‘2018 이노프롬’의 파트너국으로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노프롬은 총 95개국 기업인 5만여명이 참가해 분야별 전시와 150여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교류하는 글로벌 산업 혁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개막 축사에서 지난 6월 22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한국측의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문 대통령이 부총리 참석을 특별히 당부한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이노프롬에서 혁신의 의미를 세 가지 각도에서 제시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개막식 직후 예브게니 쿠이바체프 스베르들롭스크주 주지사 주재로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데니스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장관 등 러시아 인사들과 양국 혁신·산업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문체부

호텔 위생·종업원평가 강화

호텔등급평가 시 청결관리와 종업원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등급 유효기간 중에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평가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해 호텔등급평가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객실·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